

KTX·SRT 통합...호남고속철도 좌석 4600석 늘어난다

전국 좌석 1만6000석 증가...결제·발권 시스템 합쳐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연말부터 구분 없이 연결

정부가KTX와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정부 계획대로 통합되면, 호남고속철도 좌석 수는 주말기준 하루 평균 4600석 넘

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

간단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원화

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

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먼저 내년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사업

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던 코레일

과 SR도 내년까지 원만하게 합쳐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

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000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000석 등 25만5000석에서 약 6% 증가한다는 관측

이다.

이 가운데 호남선은 4684석 증가한다.

서울역 기준 882석, 수서역 기준 3802석

이 추가된다.

경부선은 1만127석, 경전선 372석, 동

해선 1316석, 전라선도 191석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이날 “기관 통합의 마무리는 내년 말이지만, 교차 운행 확대와 예매 시스템 일원화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이 조치가 호남선 포함 국민들의 예매 난 해소로 이어질

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민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

지방시대위 업무보고 “새 균형성장 체계 마련할 것”

김경수 “지역은 ‘전략자산’...국토전체 재구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주자로 나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권역별 성장엔진 구축, 지방대학 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본격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지방대학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식학원 협력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와 창업 친화적 창업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전략산업 중심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1시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자치분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극 중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방 권한을 확대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하는 실질적 재정분권과 함께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도입 등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의 주요성과와 관련해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
탄핵·AI 혁신 등 큰 변동 담아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신문은 이 사자성어에 대해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추체한 모순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올해가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 지선 기초비례 ‘50%·50%’ 조정

〈상무위원〉 〈권리당원〉

광역비례는 ‘권리당원 100%’...최고위원 보선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한다.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같이 수정해 보완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전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최고위는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광역비례의원

위가 넓어 권리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 취지를 살리고자 (광역은 부결된 안건 내용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동의와 의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투표에서 공천을 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찬성률로 보면 통과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투표 종료 시간을 물었다는 뒷얘기를 듣고 민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꼼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지만 의결 기준인 재적 과반 찬성(299명)에 단 2명이 부족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처리되는 보궐선거를 오는 1월 11일 시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임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이재형 양산갑 지역위원장

이 임명됐다.

이 신임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로 알려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북구 “31사단 부지 ‘K-방산’ 중심지로”

오늘 방안 공개...제2국방연구소 등 조성안 제시

광주 북구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31사단 이전에 대비해 약 147.7만㎡에 달하는 부지 활용 방안과 개발구상안을 공개한다.

북구는 9일 오전 11시 오차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31사단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현 31사단 부지를 제2국방연구소로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AI 국방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용역 결과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과 GIST·첨단 산업단지 등 산학 협력 기반을 보유해 클러스터로서 충분한 발전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글로벌 방위산업이 AI 기반 첨단 기능형 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 내 연구기관과 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국방 AI 실증과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구의 산단 대학 AI 융복합지구 등 산·학·연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경우, 광주가 K-방산과 AI 국방산업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보고회에서는 31사단 부지를 제2국방연구소·대학 허브 기업 연구단지 △컨벤션센터 등 기능별 4개 공



31사단 부지 활용 조감도

간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물리적 공간·인프라 기반 구축 △기업 유치 및 R&D 생태계 확립 △국방 AI 허브의 전국적 확대 등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하는 방안이 설명될 예정이다. ‘AI 국방 혁신 클러스터’ 조성 효과로는 고용 창출, 청년 취업 및 정주 인구 증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경쟁력 제고, 기업 매출 상승 및 산업 다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산업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분석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31사단 이전은 광주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마련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제2국방연구소를 이 부지에 유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AI 특화 국방연구소로 발전시키면, 첨단 방산 대기업의 집적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만원주택’ 경쟁률 최대 154대 1

광양·무안 236명 몰려...청년 일반공급 경쟁률 급등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광양·무안 만원주택’ 입주 모집에 총 236명이 신청하며 최고 경쟁률 154대 1을 기록했다. 단기간 접수에도 청년층이 대거 몰리면서 공급 호수의 20배가 넘는 수요가 확인됐다.

이번 모집은 정부24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이달

1~5일 미비서류 보완 절차가 이어졌다. 신청자는 광양 187명(79%), 무안 49명(21%)으로 두 지역 모두 공급량을 크게 웃돌았다.

광양은 청년층 풀림이 두드러졌다. 청년 일반공급 경쟁률은 154대 1로 가장 높

았으며, 우선공급도 8대 1을 기록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타 시·도 전입 예정 청년이 19대 1, 출산가구 4대 1, 자립준비청년 2대 1로 나타났다. 일반공급 신청자의 95%가 청년유형일 만큼 수요가 특졌다. 신혼부부 유형 경쟁률은 8대 1이었다.

무안 역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청년 일반공급 37대 1, 우선공급 4대 1로 마감됐으며, 타 시·도 전입 예정 청년 6대 1, 출산가구 5대 1 등 정책적 배려 대상자의 신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전남 섬 방문’서 계속

관광객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가 섬 지역 상권으로 환류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홍보·마케팅 15억원, 섬 관광 프로그램 15억원, 문화행사 10억원, 선포식 5억원 등 국내외 홍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중앙정부 사업과 전남 섬 방문의 해 전략, 여수세계섬박람회기 유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섬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여행사 간담회를 열어 섬별 특화 상품 개발에 착수하고, 시·군과 협력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026년은 전남 섬 관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 고유